
부록

1. 한국은행 개요	115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125
3. 경제일지	154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161

1.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광복 이후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 속에서 통화 가치의 안정, 은행·신용제도의 건전화 및 국가 경제발전 등을 목적으로 1950년 5월 5일 제정된 「한국은행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6월 12일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가 자본금 15억 원을 전액 출자한 법인이었으나, 1962년 제1차 「한국은행법」 개정 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제정 당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외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나 1962년에는 정부주도 성장정책을

원활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정부 추천위원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외환정책 수립 및 외환관리 기능의 대부분이 정부로 이관되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금융자유화 추진과 더불어 물가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및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1997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1997년 개정 시 물가안정목표제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금융통화위원회로 환원되고 위원들은 모두 상근하도록 바뀌었다. 또한 재정경제원 장관이 겸임하던 의장직을 한국은행 총재가 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담당했던 은행

그림 부록- 1. 최초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1950년 6월 5일)



자료: 한국은행

감독 기능은 신설된 통합 금융감독기구로 이관되었다. 2003년 개정 시에는 물가안정목표제를 중기적 시계에서 운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총괄 및 감시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한국은행 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정부의 사전승인 대상 예산 범위는 종전의 경비예산에서 급여성 경비로 축소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불안 발생을 예방하고 금융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논의가 확산되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이 과정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물가안정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점과

함께 금융안정도 책무라는 점을 밝혔다. 한편 2012년 개정 시에는 한국은행 총재를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2018년에는 일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하 금융통화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써 위원의 임기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는 교차임기제¹⁸⁴⁾가 도입되고 한국은행의 통계·경제조사 관련 자료요구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다.

그림 부록 2.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현장 (2021년 10월 12일)



자료: 한국은행

184) 법 개정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장이 최초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부칙에 명시)하고,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전임(前任) 위원의 임기만으로 즉시 임명되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만으로 직후 개시되도록 하였다.

(2) 조직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와 총재, 부총재, 부총재보, 본부부서, 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집행기관, 그리고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는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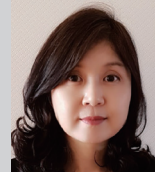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과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 그리고 임명직 위원 5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5인의 임명직 위원은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추천기관¹⁸⁵⁾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전원 상근¹⁸⁶⁾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한국은행 부총재(3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4년이며¹⁸⁷⁾¹⁸⁸⁾ 연임할 수 있다¹⁸⁹⁾.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한다. 의장은 금융통화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그림 부록- 3.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명단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이 주 열
(한국은행 총재, 2014년 4월 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임 지 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추천, 2018년 5월 17일~)
<주요경력>
제이피모건 수석본부장 / 한국 수석이코노미스트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조 윤 제
(기획재정부 장관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대통령 경제보좌관
IMF·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서 영 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금융시장부장



주 상 영
(금융위원회 위원장 추천, 2020년 4월 21일~)
<주요경력>
건국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승 현
(한국은행 부총재, 2020년 8월 21일~)
<주요경력>
한국은행 부총재보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국은행 공보관



박 기 영
(한국은행 총재 추천, 2021년 10월 6일~)
<주요경력>
연세대학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메릴랜드대학 볼티모어 카운티 조교수

자료: 한국은행

185)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및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추천한다.

186) 1997년 12월 31일 「한국은행법」 개정(1998년 4월 1일 시행) 시 통화정책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종래 비상근이던 임명직 위원의 근무형태를 전원 상근으로 변경하였다.

187) 2020년 4월 임명직 위원 4인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이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여 임명된 2인의 위원에는 일회성으로 3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이는 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188) 2021년 10월 6일 임기를 시작한 박기영 위원의 경우 전임 고승범 위원(3년 임기)의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189) 총재와 부총재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 결정, 한국은행권 발행, 여수신정책, 공개시장운영, 지급결제, 금융기관 검사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은 물론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보수기준 등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한다. 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진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개최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2021년 중 정기회의 24회, 임시회의 2회 등 본회의를 26회 개최하였다. 또한 금융경제상황에 대한 위원 간 의견 교환, 주요 현안 토의 및 본회의 상정안건 사전심의 등을 위해 위원협의회를 89회 열었으며, 예산 및 결산안의 심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14회 개최하였다.

표 부록 - 1.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회)

연도	본회의	정기		위원 협의회	심의 위원회	계
		정기	임시			
2019	25	24	1	78	16	119
2020	28	24	4	87	16	131
2021	26	24	2	89	14	129

자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해 정기회의 개최일자를 사전에 보도자료로 공표하고 있다. 연간 총 24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이 가운데 통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8회, 그리고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4회 각각 개최한다. 한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의사록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다. 이 중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은 통화신용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일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화요일에 공개하고 있다.

나. 집행간부 및 감사

한국은행은 집행간부로서 총재, 부총재 및 부총재보 5인을 두고 있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인사청문절차¹⁹⁰⁾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부총재는 총재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으로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수립한 통화신용정책을 집행하며, 한국은행의 대표로서 「한국은행법」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수시로 통보하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공할 의무도 지닌다. 현 이주열 총재는 2014년 4월 1일 임명되었고 2018년 4월 1일 연임하게 되었다.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으로 총재와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함과 아울러 한국은행 업무 전반에 걸쳐 총재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총재가 직무를 수행

190) 국회 인사청문절차는 제9차 「한국은행법」 개정에 의한 것으로 동 법 시행(2012년 4월 22일) 후 최초로 임명된 이주열 총재부터 적용되었다.

할 수 없을 경우 총재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총재보는 총재가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총재와 부총재를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은행은 감사 1인을 두고 있다. 감사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이다. 감사는 한국은행의 업무를 상시 감사하여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부서 조직 및 소관업무

2021년 말 현재 한국은행은 본부에 17개 부서(13국 1실 3원)와 10개 국소속실, 1본부를 두고 있으며 그 하부조직으로 20개 부와 148개 팀(6개 연구실 포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본부는 서울과 지방에 16개를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7개 기획조사부와 54개 팀을 두고 있으며 해외에는 5개 국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말 현재 직원수는 2,417명¹⁹¹⁾이다.

각 부서의 주요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기획협력국

기획협력국은 경영전략 수립 및 추진, 운영리스크 관리, 조직 및 인력관리, 예산편성 및 결산, 부서 간 업무 조정, 지역본부 및 국외사무소 업무활동 조정 및 종합,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관리, 법규 검토, 디지털 혁신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부록- 4. 집행간부 및 감사 명단 (2021년 12월 31일 현재)



총재
이주열
(2014년 4월 1일~)



부총재
이승헌
(2020년 8월 21일~)



부총재보
박종석
(2019년 7월 25일~)



부총재보
이환석
(2020년 3월 9일~)



부총재보
배준석
(2020년 11월 24일~)



부총재보
민재홍
(2021년 5월 17일~)



부총재보
이상형
(2021년 7월 22일~)



감사
강승준
(2021년 9월 10일~)

자료: 한국은행

191)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부총재 포함), 집행간부 및 감사 등 13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국은 대내외 의견수렴 등 커뮤니케이션 활동 조정·통합, 화폐박물관 운영 등 홍보활동, 정보자료 관리, 연차보고서 작성, 대국민 경제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전산정보국

전산정보국은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전산기기의 도입 및 관리 등 IT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인사경영국

인사경영국은 인적자원 관리, 급여 및 복리후생 업무와 부동산 및 시설 관리, 경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은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업무를 담당한다.

조사국

조사국은 거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 산업동향 분석 및 산업정책 관련 조사연구, 고용관련 분석 및 전망, 물가안정목표 설정 및 조사연구, 계량모형 개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국제경제 동향분석 및 전망에 관한 업무도 담당한다.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국은 국민소득, 통화금융, 국제수지, 물가, 자금순환표, 산업연관표, 기업경영분석 등 경제통계의 편제, 분석 및 개발과 함께 통계품질평가, ECOS(경제통계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안정국

금융안정국은 금융안정상황 분석·종합평가, 시스템리스크 측정·분석 및 모형 개발, 거시건전성정책 수단 및 파급경로 분석, 은행 및 비은행 관련 조사연구, 금융제도 관련 조사연구, 금융안정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금융기관 경영분석 및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통화정책국

통화정책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입안, 정책수단 기획 및 운용, 통화신용정책 여건 및 효과 분석, 통화신용정책 관련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시장국

금융시장국은 통화신용정책의 집행, 통화·금리 분석 및 전망, 금융시장 및 기업금융 동향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금융결제국

금융결제국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및 감시, 지급결제제도 관련 조사연구, 전자금융관

련 기획 및 조사, 금융정보화 추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여수신 및 국고, 증권, 기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발권국

발권국은 화폐의 발행과 유통·관리, 화폐 및 발권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발권업무 기계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국제국

국제국은 외환·국제금융에 관한 기획·조사·분석, 외환시장 및 환율 관련 업무, 보유외환 및 외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외국환 거래 신고 및 사후관리, 외환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검사, 외환전산망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국은 국제협력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국제금융기구 및 중앙은행 등과의 교류 및 금융·지식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외자운용원

외자운용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 기획, 국외 운용 및 리스크 관리, 운용성과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경제연구원

경제연구원은 통화금융, 금융제도, 국제금융 및 무역, 거시경제, 산업, 노동, 북한경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연구와 대외 연구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실

감사실은 한국은행 업무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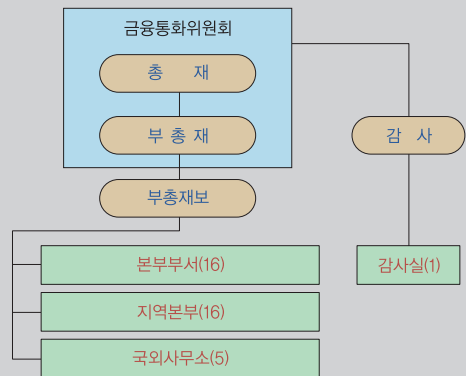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와 함께 화폐 수급, 국고금 수납, 증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외사무소

국외사무소는 주재국 및 인근 관심 국가의 금융경제에 관한 조사와 정보수집, 외화자산의 국외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림 부록- 5. 조직 구성



자료: 한국은행

라. 한국은행조직도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 1)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강원, 인천, 제주, 경기, 경남, 강남본부 2) 부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제주, 경기본부 3) 목포, 전

스크팀, 대외협력팀, 조직관리팀, 예산회계팀
역경제팀
규팀
신기술반), 데이터서비스팀
팀(정보자료반), 커뮤니케이션운영팀(사료반), 뉴미디어팀, 화폐박물관팀
제교육운영팀
워크추진반), IT리스크부(IT리스크총괄팀, 정보보호팀, 품질관리팀), IT운영부(회계시스템팀, 결제시스템팀, 경영시스템팀(IT지원 IT관리부(회계서버팀, 정보서버팀, 통신팀)
원반), 인사운영팀, 급여후생팀, 노사협력팀(열린상담반), 재무운영팀
영팀, 조달관리팀
영팀
영팀, 연수지원팀, 교수팀
석팀, 거시재정팀, 국제무역팀, 고용분석팀, 물가분석부(물가동향팀, 물가연구팀), 거시모형부(전망모형팀, 모형연구팀), 국제경제 자유무역경제팀, 아태경제팀, 중국경제팀)
구반), 통계조사팀, 통계정보팀, 금융통계부(금융통계팀, 자금순환팀, 국제수지팀, 국외투자통계팀, 기업통계팀), 국민계정부(국민 민소득반), 지출국민소득팀, 투입산출팀, 국민B/S팀, 물가통계팀)
리스크팀, 안정분석팀, 금융규제팀, 금융시스템분석부(은행분석팀, 비은행분석팀), 금융안정연구부(금융안정연구팀, 금융제도연
행1팀, 일반은행2팀, 특수은행팀, 인터넷전문은행팀
획팀, 정책분석팀, 정책협력팀, 정책연구부(통화신용연구팀, 정책제도연구팀)
영팀, 자금시장팀, 금융시장연구팀, 자본시장부(채권시장팀, 주식시장팀)
제협력반, 지급결제개선반, 결제연구팀, 결제운영팀, 결제업무팀, 결제감시부(결제안정팀, 결제리스크팀), 용기획팀, 전자금융조사팀, 디지털화폐연구팀(기술반, 디지털화폐동향분석반)
획팀(화폐수급시설개선반), 화폐수급팀, 화폐관리1팀, 화폐관리2팀, 화폐연구팀
팀, 외환시장팀, 국제금융부(자본이동분석팀(외환분석체계개선반), 국제금융연구팀), 외환업무부(외환심사팀, 외환건전성조사팀, 외환정보팀)
크푸르트, 동경, 런던, 북경(홍콩, 상해)
구반), 국제기구팀, 지역기구팀, 금융협력팀, 교류협력부(대외교류팀, 지식협력팀)
획팀, 리스크관리팀, 위탁1팀, 위탁2팀), 투자운용부(운용전략팀, 정부채1팀, 정부채2팀, 회사채팀, 자산유동화채팀), 운용지원부 리반), 외자시스템팀)
화연구실, 국제경제연구실, 거시경제연구실, 미시제도연구실, 북한경제연구실
, 대전충남, 충북, 강원, 인천, 제주, 향, 강남
총무팀 ¹⁾ , 기획조사부(기획금융팀, 경제조사팀 ²⁾ , 기획조사팀 ³⁾ , 업무팀, 화폐관리팀 ⁴⁾
력반), 경영관리감사팀, 정책현업감사팀, 외환국제감사팀, 조사통계감사팀, 전산정보감사팀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차례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21년 1월 15일)	127
◇ 통화정책방향 (2021년 2월 25일)	127
◇ 통화정책방향 (2021년 4월 15일)	128
◇ 통화정책방향 (2021년 5월 27일)	129
◇ 통화정책방향 (2021년 7월 15일)	130
◇ 통화정책방향 (2021년 8월 26일)	131
◇ 통화정책방향 (2021년 10월 12일)	132
◇ 통화정책방향 (2021년 11월 25일)	132
◇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1년 12월 23일)	133

(2) 통화신용정책 의사록 전문

◇ 2021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월 15일)	
◇ 2021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2월 25일)	
◇ 2021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4월 15일)	
◇ 2021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5월 27일)	
◇ 2021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7월 15일)	
◇ 2021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8월 26일)	
◇ 2021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0월 12일)	
◇ 2021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1월 25일)	

(3)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21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21년 1월 15일)	143
◇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2021년 1월 28일)	143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1년 3월 11일)	144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1년 3월 25일)	144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1년 6월 22일)	144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 (2021년 6월 30일)	145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 (2021년 6월 30일)	145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1년 7월 29일)	146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1년 9월 9일)	146
◇ 회사채·CP 매입기구의 자본감소에 대한 동의 (2021년 12월 23일)	147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 (2021년 12월 23일)	147

(4)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126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3월 25일)	148
◇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6월 22일)	149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9월 24일)	150
◇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12월 23일)	151

(5) 금융안정회의 의사록 전문

153

◇ 2021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3월 25일)
◇ 2021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6월 22일)
◇ 2021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9월 24일)
◇ 2021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2월 23일)

(1) 통화신용정책 방향

◇ 통화정책방향

(2021년 1월 15일, 제1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 흐름이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백신 접종 개시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제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민간소비가 코로나19 재확산 심화의 영향으로 위축되었으나, IT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나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석유류 및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의 영향 지속 등으로 0%대 중반의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0%대 중후반 수준에 머물다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0%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 상승, 국내기업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위험추구 성향이 강화되면서 주가가 큰 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가운데 장기시장금리는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1년 2월 25일, 제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이동제한조치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더딘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백신 접종 확대 및 미국 신정부의 재정부양책 추진에 따른 경기회복

- 기대 등으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였다.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 등으로 부진이 이어졌으나, 수출이 IT 부문을 중심으로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회복세를 유지하였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계속 부진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확대에도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0%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0%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 내외 수준으로 높아졌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상승, 점진적인 경기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난 11월 전망치(1.0%)를 상회하는 1%대 초중반을,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 내외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주가는 경기회복 기대와 단기금등에 따른 경계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상당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그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1년 4월 15일, 제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실시,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회복 흐름이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회복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요국 주가와 국채금리가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는 부진이 완화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가 증가로 돌아서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회복속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2

월에 전망했던 수준(3.0%)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 지속 등으로 1%대 중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0%대 중반 범위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월 전망 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 내외 수준에서 등락하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경제지표 개선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주가가 상승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으로 소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상황, 기간 정책대응의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에 유의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1년 5월 27일, 제10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지속,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선호 지속에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주요국의 주가 오름세가 주춤해졌으며, 국채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회복세가 확대되었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민간소비도 부진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는 등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3.0%)를 큰 폭 상회하는 4% 내외 수준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초반으로 크게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반에서 소폭 높아졌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치(1.3%)를 상당폭 상회하는 1%대 후반 수준을, 근원인플레

이선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경기회복세 강화 등으로 장기시장금리가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오름세를 이어가다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다소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강화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전개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고 수요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및 주요국의 경기 상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 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1년 7월 15일, 제14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및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가가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여 상승세를 이어가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

내었으나, 장기 국제금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상당폭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각국 정책대응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도 회복 흐름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 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주춤하겠으나 추경 집행 등으로 다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초중반으로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점차 1%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였다.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상당폭 상승한 반면 10년물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가 상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1년 8월 26일, 제17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다.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였으며,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시장국 주가는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및 파급효과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민간소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

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5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지속,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초반을 나타내었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금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대 초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에 영향받아 주가가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다. 국고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1년 10월 12일, 제20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0.7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었으며, 주가는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으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둔화되었던 민간소비도 최근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호조를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백신 접종 및 그에 따른 경제활동 확대, 추경 집행 등으로 점차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중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4%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서비스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당분간 2%대 중반 수준을 나타내다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대체로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 받아 장기시장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2021년 11월 25일, 제23차)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7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와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영향받아 국제금리 변동성이 확대되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다. 주가는 양호한 기업 실적 등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가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으나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민간소비가 백신접종 확대와 방역조치 완화에 힘입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가 증가가 지속되는 등 개선세를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GDP성장률은 지난 8월에 전망한 대로 금년 중 4%, 내년 중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지난해 공공서비스가격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3%대 초반으로 높아졌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2%대 중반으로 상승하였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2%를 상당폭 웃돌다가 점차 낮아져 내년 중 연간으로 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근원인플레이션율은 1%대 후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3년물을 중심으로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소폭 상승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2021년 12월 23일, 제25차)

I.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가 회복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코로나19 전개에 따른 불확실성은 큰 것으로 평가되며, 글로벌 물가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 세계경제는 변이바이러스 확산 우려에도 백신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의 제약이 좀더 완화되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은 방역정책 완화, 주요국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신흥국의 경우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여타 신흥국은 백신접종이 확대되면서 회복흐름이 재개될 전망

- 다만 코로나19 전개 상황이 세계경제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 글로벌 공급병목, 중국경제의 흐름 변화 등도 리스크로 잠재

□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공급측 요인의 영향은 점차 줄어들겠지만 경기회복으로 수요측 압력이 커지면서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이같은 글로벌 성장·물가 흐름을 고려할 때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도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

2. 경제성장

• 국내경제는 3% 수준의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

□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건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민간소비는 경제활동 제한 완화기조,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수출과 설비투자가 글로벌 경기회복, 견조한 IT 수요 등으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건설투자도 점차 회복될 전망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감염병 전개 상황, 글로벌 공급차질 완화 속도 등이 주된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

- 국내외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경제활동 강화, 신흥국 백신접종의 빠른 확대, 글로벌 공급차질 조기 해소 등은 상방요인으로,

국내외 감염병 확산세 심화, 글로벌 공급차질 장기화, 중국경제 성장세 둔화 등은 하방요인으로 잠재

□ 고용상황은 대면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3.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낮아지겠지만 2%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등 공급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다소 낮아지겠지만 2%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수요측 압력 확대, 글로벌 공급병목의 영향 등으로 2%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

□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평가

○ 국제원자재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이 상방 리스크로,

반면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세 심화에 따른 국제유가 하락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

4. 금융·외환시장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대내외 주요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경기 및 인플레이션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따라

금리, 주가, 환율 등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소지

○ 주요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및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가능성, 중국의 성장세 둔화 등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상존

□ 국내 외화유동성 사정은 경상수지 흑자, 양호한 대외건전성 등을 바탕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일 전망

○ CDS프리미엄 등 외화조달 지표 및 단기외채 비율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화 유출입은 대체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예상

5. 금융안정

• 금융기관 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융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가운데서도 잠재적 취약성이 일부 확대될 소지

□ 금융기관 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예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증가규모는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을 이어갈 전망

○ 기업대출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 등에도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확대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

□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경기회복으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자본적정성 등 복원력도 규제 기준을 상당폭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
- 다만 금융지원조치 정상화,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른 취약부문의 신용위험 증가로 잠재적 리스크는 다소 확대될 소지

II.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개선 방안을 마련
- 통화정책 운영체계의 점검·개선,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통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
-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지급결제의 인프라 개선 및 안전성 제고
- 기후변화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

1. 기준금리 운용

-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조정) 기준금리는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금융불균형 위험이 완화될 수 있도록

경제상황 개선에 맞추어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

-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에도, 국내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양호한 흐름과 소비 회복세의 지속 등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 목표수준(2%)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글로벌 공급병목 장기화, 수요측 압력 확대, 인플레이션 기대 상승 등으로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

-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자산시장 등의 상황에 계속 유의하면서 통화정책을 통한 금융불균형 완화 노력을 지속

— 과도한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를 계속 완화해 나감으로써 가계대출 증가세 등의 추세적 안정을 도모

- (완화 정도 조정 시기) 완화 정도의 조정 시기는 대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금융불균형 상황,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의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

2.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지속)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을 통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지속

○ 한시적으로 운용중인 지원 프로그램을 해당 기업의 어려움이 충분히 완화될 수 있도록 당분간 유지

○ 동 프로그램의 종료 여부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방역정책 변화, 그에 따른 관련 기업의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

□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효성 강화)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의 정책효과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중장기 개선 방향을 모색

○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개선, 대출금리 경감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용의 전반적인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중장기적인 운용 방향을 검토

3.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 (통화정책 운영체제 점검 및 개선) 금융·경제외건 변화, 중앙은행 역할 확대 요구 등에 대응하여 통화정책 운영체제를 재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 현행 물가안정목표제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검토

○ 금융안정 책무를 현행 통화정책 운영체제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

□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

○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 정책결정 배경, 향후 정책방향 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

○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연 2회) 등을 통해 물가상황, 전망, 리스크 요인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

□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연구·분석 강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분석을 강화

○ 디지털화, 저탄소경제 전환, 양극화 심화, 인구구조 변화 등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효과 제고 방안을 연구하여 관련 정책수단의 확충 방안 등을 모색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 지속) 국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모니터링을 강

화하고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실시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의 경우, 매입기한 종료(2021년 12월 말) 이후에는 기 매입채권의 만기 도래에 맞추어 대출금을 회수

□ (공개시장운영 유효성 제고) 일상적 공개시장운영 및 시장안정화 조치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애로 증대 및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증권대차 활용 등

-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과의 협의회 등 공개시장운영 관련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충하고 주요국 공개시장운영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

□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 글로벌 정책·금융 협력 강화를 통해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

- 통화스왑 네트워크 확충, 다자간 통화스왑(CMIM)의 실효성 제고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한편 주요 국제기구 및 중앙은행 협의체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금융 디지털화, CBDC 도입, 기후변화 등 주요 이슈 관련 정책 대응을 주도*

*2022년 동아시아·태평양 중앙은행기구(EMEAP)의 의장직 수행 예정

5.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

□ (금융시스템 안정 점검 강화) 대내외 위험 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의 변화를 조기에 포착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점검을 강화

- 위험선호성향, 신용 및 자산시장 상황 등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여 금융불균형 위험의 누적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가 현재화되지 않도록 노력

— 금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공동검사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의 가계·기업 부채 리스크 관리 상황, 금리 정상화 과정에서의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변동 등을 엄밀히 분석

- 중장기적인 금융안정 여건의 변화*가 금융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연구도 강화

*기후변화, ESG 투자 증대, 빅테크·핀테크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 확대 등

□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속) 금융안정 현안 및 리스크에 대해 국내외 금융안정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

-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통해 정책당국과 긴밀한 정책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BIS 등 국제기구의 글로벌 금융안정 이슈 및 금융규제, 금융시스템 복원력 강화 등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

6.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안전성 제고

향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노력

□ **(CBDC 도입 관련 기반 강화)** 디지털화의 빠른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

- CBDC 모의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고 그간의 법적·제도적 연구 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강화

□ **(지급결제 효율성 제고 노력 강화)**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 및 글로벌화에 대응하여 지급결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강화

- 금융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중앙은행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지급결제인프라 연계**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금융환경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

*실시간총액결제(RTGS; Real Time Gross Settlement)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국제표준전문(ISO 20022) 도입 등

**이를 통해 국외 송금의 처리속도 향상, 수수료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현재 G20, BIS 등 국제기구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중

- 지급결제 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 요구에 발맞추어 한국은행의 지급결제 관련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정립하는 방

□ **(지급결제 안전성 강화)** 빅테크 등 새로운 지급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기관 등의 사이버 복원력 관리상황을 평가·개선

7. 기후변화 대응 강화

□ **(기후변화 관련 조사·연구 강화)** 기후변화 관련 정보·통계 수집기반 구축 및 기후변화 리스크 분석을 강화

- 국내외 기후변화 관련 정책 변화, 연구 성과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국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통계를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축적된 정보·통계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의 금융·경제적 파급효과,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

— 이행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금융안정보고서 수록, 2021년 6월)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물리적 리스크**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개발을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실제 기후변화(자연재해 등)에 따른 금융·실물자산 손실 발생 리스크

□ **(중장기적인 정책수단 확충 방안 모색)** 기후변화

가 국내 금융·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책운영 여건에 적합한 정책수단
활용 방안을 강구

○ 친환경 부문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유도
하기 위한 대출 및 담보 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방안을 모색

○ 외화자산 운용시 친환경 부문에 대한 투자 비
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

한국은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며,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와 기본방향 하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유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 **(물가안정목표제)**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핵심 목적인 물가안정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영하며, 현재 물가안정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2%이다.

○ **(중기적 운영 시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통화신용정책 외에도 다양한 대내외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물가안정목표는 일시적·불규칙적 요인에 따른 물가변동, 통화신용정책의 파급시차 등을 고려하여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다.

○ **(미래지향적 운영)** 물가상승률이 중기적 시계에서 목표수준에 수렴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미래 지향적으로 운영하되,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거나 하회할 위험을 균형있게 고려한다.

— 물가안정목표 수준으로의 수렴 가능성은 물가 및 성장 전망과 더불어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 및 위험요인,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착 정도,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 **(신축적 운영)** 중기적 시계에서의 물가안정목표 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한다.

□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금융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통화신용정책 운영시 금융안정 상황을 신중히 고려한다.

○ **(금융시장 안정 노력)** 금융불안 발생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제약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중개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

○ **(금융불균형 유의)** 부채 누증 등 지속적인 금융불균형은 궁극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있어 이에 유의한다.

—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공표하여 통화신용정책 운영이 금융불균형의 과도한 누적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신용정책만으로 금융안정을 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불균형 누적 억제를 위해서는 통화신용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2) 통화신용정책 의사록 전문

QR BOX



QR 1

2021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월 15일)



QR 2

2021년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2월 25일)



QR 3

2021년도 제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4월 15일)



QR 4

2021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5월 27일)



QR 5

2021년도 제1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7월 15일)



QR 6

2021년도 제1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8월 26일)



QR 7

2021년도 제20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0월 12일)



QR 8

2021년도 제2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1월 25일)

(3) 통화신용정책업무 주요 내용

◇ 2021년도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 및 대출조건 결정 (2021년 1월 15일, 제1차)

1. 대출금 한도, 상환기한 및 이율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대출금 한도 및 상환기한

대출구분	회계별	대출금한도 (억 원)	상환기한	기타
일시대출금	통합계정	400,000	2022년 1월 20일	대출취급기한: 2021년 12월 31일(단,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 대출금중 미상환액을 한도에 포함하여 관리)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대출일로부터 1년 이내(단, 2022년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2021년 12월 31일	
합계		500,000		

나. 이율은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를 더한 율로 한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통화안정증권(91일물) 수익률의 단순평균으로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다. 대출형식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대출금 한도와 대출취급기한 내에서 정부의 일시차입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 한도 및 조건 등을 확인한 후 신용대출로 취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부대조건

가.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나.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기조적인 부족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양곡관리특별회계의 기존 차입금이 상환계획에 따라 상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국은행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3. 위임사항 : 건별 대출의 실행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한다.

4. 시행일자 : 2021년 1월 15일

◇ 「외화예금지급준비규정」 개정 (2021년 1월 28일, 제2차)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에 대한 근거법 명시)

□ 외화예금 지급준비제도의 근거가 「한국은행법」이라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 규정의 목적 조항을 정비

○ 동 규정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 제4장 제2절(금융기관

의 예금과 지급준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반영

항 제5호~제9호)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기관 명확화)

□ 한국은행법상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이 금융기관 인 점을 감안하여 외화예금 지급준비금 부과 대상기관을 「한국은행법」 제11조의 '금융기관'으로 수정

○ 위 증권과 관련된 매매제한 조항 및 신용위험 관리 방안 삭제(제4조 제2항~제4항 및 제6조의2)

□ 시행일자 : 2021년 1월 28일

□ 시행일자 : 2021년 4월 1일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1년 3월 11일, 제5차)

□ (주금공 MBS 매매 대상범위 환원) 한시적으로 증권 단순매매 대상에 포함하였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으로 다시 한정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1년 3월 25일, 제6차)

□ 2021년 4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 한도는 현재의 43조 원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2020년 4월 규정개정시 삭제하였던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 주택저당증권을 환매조건부매매 대상증권으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 환원 (제4조 제1항 제4호)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 신성장·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도,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유효기간 종료 조항 정비) 유동성 공급 경로 확충을 위해 한시적으로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에 추가했던 증권을 제외하고 동 증권 관련 매매제한 조항 및 신용위험 관리 방안을 정비

○ 한도 유보분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현재의 16.1조 원을 유지하되, 2022년 12월 1일부터는 0.1조 원으로 한다.

○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전력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토지주택공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협은행 및 농협중앙회, 수협 및 수협중앙회 발행 채권 매매 근거 삭제(제4조 제1

◇ 「공개시장운영규정」 개정 (2021년 6월 22일, 제12차)

□ 현재 최장 2년까지인 통화안정증권 만기를 3년까지로 연장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 시행일자 : 2021년 8월 1일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 (2021년 6월 30일, 제13차)

1. 변경 내용

□ 한국은행의 SPV에 대한 대출 부대조건인 SPV 포트폴리오의 신용등급별 비중* 준수 시점을 종전 SPV 설립 1년후(2021년 7월 13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

* AA등급(A1등급 포함) 25% 이상, A등급(A2등급 포함) 55% 내외, BBB등급 이하(A3등급 포함) 20% 이하

** SPV의 회사채·CP 매입기간 종료일(2021년 7월 13일→2021년 12월 31일로 변경)

2. 시행일

□ 2021년 6월 30일

3. 기타

□ 상기 변경 내용을 제외한 한국은행의 대출 한도, 금리, 기간, 담보 및 여타 부대조건 등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 (2020년 7월 17일, 금통위 의결)」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금통위 의결)」

□ 시행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상기 변경 내용을 시행일부터 동일하게 적용

□ SPV의 설립 목적 및 한국은행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대출의 만기 도래시 1년 단위로 재대출(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1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 (2021년 6월 30일, 제13차)

1. 대출금액: 1조 7,800억 원 이내*

* 2020년 7월 23일 실시한 최초 대출금액 1조 7,800억 원에서 재대출취급일 전까지 조기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잔액 기준

2.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3.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4.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예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5. 대출금 회수: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6. 이자수취: 3개월마다 후취

7. 기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 (2020년 7월 17일, 금통위 의결)」 및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 (2020년 12월 24일 및 2021년 6월 30일, 각각 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 금액, 금리 및 취급일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 개정 (2021년 7월 29일, 제15차)

-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하조치 종료를 6개월간 유예
- 이에 따라 단계적인 비율 인상 조치도 6개월씩 순연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인상 계획 변경(안)

(변경전)					(변경후)				
현행	21.8월	22.8월	23.8월	24.8월	현행	22.2월	23.2월	24.2월	25.2월
50%	70%	80%	90%	100%	50%	70%	80%	90%	100%

- 시행일자 : 2021년 8월 1일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결정 (2021년 9월 9일, 제18차)

-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할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총한도는 현재의 43조 원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별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2.5조 원을 유지하되 2021년 12월 1일부터는 1.0조 원 감액한 1.5조 원으로 한다.
 -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의 5.5조 원에서 3조 원 감액한 2.5조 원으로 하고 2021년 12월 1일부터는 1조 원 증액한 3.5조 원으로 한다.
 -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 및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는 현재의 규모를 유지한다.
 - 한도 유보분은 2021년 10월 1일부터 현재의 16.1조 원에서 3조 원 증액한 19.1조 원으로 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는 0.1조 원으로 한다.

◇ 회사채·CP 매입기구의 자본감소에 대한 동의(2021년 12월 23일, 제25차)

1. 「자본금 감소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 요청」(2021년 12월 22일, SPV2021-97)과 관련하여 SPV의 자본감소에 동의한다.
2. SPV의 자본감소에 따라 한국은행 선순위대출의 조기상환액 및 조기상환 시기를 조정하고, 이와 관련한 계약서의 수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3. 한국은행 총재는 SPV의 자본감소 및 이에 따라 그 액수와 시기가 조정된 한국은행 선순위대출의 조기상환이 이행된 후 그 결과를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채·CP 매입기구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만기 연장) 실시 (2021년 12월 23일, 제25차)

1. 대출금액: 1조 7,800억 원
 2. 대출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스프레드를 가산한 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는 통안증권(1년물) 금리*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차이**로 하며, 해당 값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0으로 함
- * 4개 민간채권평가사(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에프앤자산평가) 평균 기준

** 대출실행일 직전 5영업일간의 산술평균 값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3. 대출기간: 대출취급일로부터 1년

4. 대출담보: SPV 전체 자산

- 한국은행은 SPV가 보유한 회사채·CP, 한국은행 당좌예금 및 한국산업은행 수납관리에금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
- SPV는 대출취급일에 대출금 상당의 어음을 발행하여 한국은행에 제공

5. 대출금 회수: 만기 일시 상환

- 중도 상환 가능

6. 이자수취: 3개월마다 후취

7. 기타

-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한도 및 조건 결정 (2020년 7월 17일, 금통위 의결)」, 「회사채·CP 매입기구(SPV)에 대한 대출 조건 변경 (2020년 12월 24일 및 2021년 6월 30일, 각각 금통위 의결)」의 부대조건을 준용한다.
- SPV에 대한 대출취급일, 대출금리 산정 등 세부사항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한다.
- 한국은행 총재는 본 대출의 실행후 그 내용을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금융안정회의 주요 내용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3월 25일, 제6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17호-「금융안정 상황 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3월 1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인 금융안정상황을 충실히 점검하였으며 이슈 선정 및 분석 내용도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종합평가 부분에서 금융불균형 심화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우려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금융지원 정상화 속도 조절이라는 제안이 서로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서 여러 위원들은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먼저 고신용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소득뿐 아니라 대출만기 구조 및 금리 등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또한 은행 및 비은행 가계대출을 하나의 틀 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중금리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다른 일부 위원은 가계의 투자자금이 간접투자에서

직접투자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 금융안정 측면에서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국제비교 등을 통해 보다 심도있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가계의 금융자산 리밸런싱(rebalancing)으로 인해 은행의 수신 구조가 단기화되면서 자산·부채 만기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음.

한편 여러 위원들은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되고 기업간 격차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잠재부실규모를 추정하고 불균등 회복이 금융기관의 신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다만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잠재부실이나 신용손실이 얼마나 우려할만한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아울러 이자보상배율이 마이너스를 지속하는 등 원리금 상환능력이 취약한 기업들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취약기업들의 경영상황 및 장기존속 배경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중앙은행이 기후변화 대응 및 고탄소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배경에 대해 국제적 논의 상황 등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음.

◇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6월 22일, 제12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6월)(안)을 의결하고 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에서는 금번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금번 보고서에서는 신용·자산시장, 금융기관 등 각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과 복원력을 구분하여 점검하되, 금융불균형 등 금융시스템 내 중장기적 잠재 취약성에 대한 분석을 금융취약성지수의 편제 등을 통해 강화하였으며, 가계와 기업의 취약차주 관련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전반적인 금융 불균형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였음. 아울러 보고서 끝부분에는 종합평가 섹션(section)을 추가하여 금융안정 상황 등에 대한 평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 및 리스크 요인, 정책당국의 대응방안 등이 체계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음으로 6월 8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가계·기업의 취약부문, 금융불균형 심화 등 금융안정과 관련한 여러 이슈들을 균형있게 수록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먼저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평가와 관련하여, 일

부 위원은 늘어난 가계부채의 자산시장 유입에 따른 영향을 분기별 가계부채 동향 분석 및 예측 등을 통해 보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더욱 증가한다면 우리 경제가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부채 규모가 어느 수준이면 부채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평가할 때 순금융자산 및 이자지급액 등을 활용한 보조지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향후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총당금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또한 다른 일부 위원은 빈티지(vintage) 연체율 분석 대상을 단기 신용대출, 중소기업대출 등으로 확장·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암호자산시장 동향을 점검할 때 비트코인(bitcoin)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altcoin)들의 현황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외채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동외채 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음으로 주요 현안 분석 중 ‘금융취약성지수(FVI) 신규 편제 결과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를 활용하여 자산시장 여건 및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누증이 금융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취약성지수의 과거 위기 전 상승 원인과 위기 직후 하락 원인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음.

‘금융불균형 누증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금융불균형 누증이 실물경제 하방리스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평균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가계의 취약부문 점검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DSR은 대출 만기, 금리 등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DSR 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은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 증가 배경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이자보상배율 취약기업이 장기 존속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 「금융안정 상황점검」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9월 24일, 제19차)

(1) 금융안정국장이 보고 제59호-「금융안정 상황점검」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관련부서에서는 9월 13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여러 위원은 금번 보고서에 대해 주요 현안분석의 과제를 시의적절하게 잘 선정하였으며 참고박스(box)의 분석자료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분석한 것으로 평가하였음.

이어서 여러 위원은 주요 이슈 중 ‘가계 및 기업 레버리지 수준 평가 및 시사점’과 관련하여 계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임계수준이 추정 방식 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하며, 기업부채 등의 경우 업종별, 규모별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시계에서 분석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국내 기업투자 대부분이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업투자가 부채비용 외에 장래 성장 가능성 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아울러 정부부채에 대해서도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음.

또한 여러 위원은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간 조화로운 운용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거시건전성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분석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면서 여전히 거시건전성정책의 명확한 개념정립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보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여러 위원은 상대적으로 대내외 충격에 취약할 수 있는 청년층, 자영업자 및 한계기업 등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음.

일부 위원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증가는 구조적 현상일 수 있으므로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각 취약계층의 소득수준, 자산축적 정도, 자산가격 및 신용위험 사이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관련부서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면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음.

◇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 주요 논의 내용 (2021년 12월 23일, 제25차)

(1) 담당 부총재보가 「한국은행법」 제96조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21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위원 간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금번 보고서에서는 본문의 경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을 신용·자산시장, 금융기관 등의 부문별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살펴보되 개황 부분은 이전과 달리 간결하게 본문 내용을 축약하면서도 향후 리스크 등이 명료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하였음. 또한 현안 분석과 참고 박스에서는 금융불균형 상황, 신용위험 증대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국내외 인플레이션 압

력,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금융·경제 여건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데 각별히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다음으로 12월 9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여러 위원들은 금번 보고서가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국내외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영향 등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균형있게 다루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일부 위원들은 그 내용들을 포함한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개황 부분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금융안정 상황 및 복원력 평가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가계대출 증가율 추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배경, 고신용 차주 비중이 상승한 원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위원은 취약차주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고위험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가계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두 지표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또 다른 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기업부문에 대해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였는데 어느 정도가 투자에 활용되었는지, 중장기적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아직까지는 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동 위원은 정부가 거시건전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적보증 확대가 주택금융 익스포저(exposure)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가계 M2 증가율과 가계의 자산투자와의 관계를 과거 사례 등을 통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다른 일부 위원은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나리오 설정 근거, 모형의 유의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추가해 줄 것을 제안하였음.

주요 현안 분석과 관련하여 일부 위원은 「최근 국내외 금융불균형 상황 평가 및 시사점」에서 금년 3/4분기 들어 금융취약성지수가 하락한 원인을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이어서 동 위원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소득 분위별 대출격차 확대에 따라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내용의 근거를 소득 분위별 대출의 용도 차이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외국인 국내증권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통화정책 정상화의 의미, 과거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증권자금 유출입 사례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최근 금융부문의 상호연계성 추이 및 리스크 점검」에 대하여 기업부문에 대한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된 데에는 기업업황 부진 이외에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기업의 자금수요 둔화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음.

관련 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수정·보완한 후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음.

(5) 금융안정회의 의사록 전문

QR BOX



QR 1

2021년도 제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3월 25일)



QR 2

2021년도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6월 22일)



QR 3

2021년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9월 24일)



QR 4

2021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21년 12월 23일)

3. 경제일지

(1) 통화·금융·재정

- 1.15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2.3 ▷ 금융위원회, 「공매도 부분적 재개」 발표
 - 5.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
 - 공매도 금지기간 중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마무리

- 2.25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4.15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4.22 ▷ 금융위원회,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마련
 - 중·저신용층 확대 공급을 통한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 개편
 - 인터넷 전문은행 중·저신용층 대출공급 활성화 등 디지털 기술발전을 활용한 대출금리 인하 유도
 - 금리산정 합리화 및 중개수수료 인하 유도, 은행-제2금융권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등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응으로 저신용차주 흡수 유도

- 5.11 ▷ 정부, 「기업구조혁신펀드(3차) 추가 조성」 발표
 - 2021년 정부재정, 정책금융기관, 민간투자 등을 통해 총 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
 - 신생·소형 운용사 대상 별도 출자재원을 할당하여 시장진입 유도
 - 현 민간자금 매칭비율은 펀드 결성금액의 50% 이상이나, 펀드 성격에 따라 탄력적(40~60%)으로 운영 예정
 - 부채투자전용펀드(PDF)의 투자대상을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까지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

- 5.27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5.31 ▷ 정부,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 발표
○ 무주택 실소유자의 주택구매를 위한 우대혜택 요건 완화 및 확대 실시
○ 우대요건 중 연소득 부부합산(0.8억 → 0.9억), 생애 최초(0.9억 미만 → 1.0억 미만)로 확대
○ 서민·실수요자 우대요건 충족시 우대혜택 LTV 기준 +10%p → 4억 한도 최대 +20%p로 확대
○ 청년 전월세대출 공급규모 제한 폐지, 1인당 한도상향 및 보증료 인하
○ 보금자리론 지원한도 3.6억 원(+0.6억)으로 확대
- 7.15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50%) 유지
- 8.26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0.50% → 0.75%)
- 9.27 ▷ 기획재정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및 소비회복세의 경제 전반 확산을 도모
○ 10월 1일부터 2개월간 7천억 원 규모로 만 19세 이상, 2021년 2/4분기 중 본인명의 체크,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지원
○ 1인당 월별 10만원 한도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대상으로 하되 부적합한 일부 업종·품목은 제한
- 10.12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현 수준(0.75%) 유지
- 10.26 ▷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 지원’이라는 상충된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로 설정
○ 상환능력 중심 대출심사 관행 확립, 최근 급증한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 등 가계부채관리 3개 과제 세부방안 마련

- 금융회사 가계대출 관리 내실화, 취약계층, 실수요자 보호 강화 등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 기반 조성
- DSR 관리기준 강화, 전세대출 증가세 관리, 금리인상충격 완화 등 향후 증가세 지속 확대에 대비한 추가 관리방안(Plan B) 마련 추진

11.25

- ▷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의결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 상향 조정(0.75% → 1.00%)

12.20

- ▷ 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
 -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정책조합 최적화, 피해부문 중심 내수 진작,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 (민생경제 회복화)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新양극화 대응
 -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부동산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 혁신, 벤처·창업 및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공정·상생·사회적 자본 확산, 노동·재정·공공부문 혁신

(2) 무역·외환

1.20

- ▷ 정부,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발표
 -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체계 도입 및 자체위험 관리기준 수립 의무화를 통한 금융회사의 관리·대응역량 강화
 - 비은행권의 외화조달·운용에 관한 3종 지표를 새로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정형·우발적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를 마련
 - 비은행권 외화유동성 비율, 은행권 외화LCR,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기존 외환건전성 제도의 미비점 보완
 -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신설하여 외환부문 거시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관간 협업 강화

- 3.1 ▷ 한국은행, 스위스중앙은행과 통화스왑 연장계약 체결
 - 기존 계약(2021년 3월 1일 만료)에 비해 목적을 포괄적으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4.1 ▷ 정부,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 발표
 - 10대 핵심 방역물품 선정 및 해외시장 진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존 수출 지원사업 내 K-방역 트랙(신산업·K방역 혁신, 2021년 29.5억 원) 마련
 - K-방역 전용 수출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맞춤형 수출지원 강화
 - 방역패키지 상품화, 차세대 이동형 병원 개발 등 방역물품 미래 수출 수요 발굴
 - K-방역 수출 지원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기관별 연계 강화

- 6.17 ▷ 한국은행, 미 연준과 통화스왑계약 기간 연장
 - 당초 2021년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던 통화스왑계약을 12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

- 8.5 ▷ 산업부,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 방안」 발표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체계구축, 국내 기술규제 심사 및 이행점검 강화,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 서비스 제공 추진
 - 글로벌 수준에 맞춘 기술규제 정비, 디지털·그린뉴딜 관련 해외 기술규제 대응 강화, KOLAS 시험성적서의 통용 확대 등을 통한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추진으로 국내·외 기술규제 선순환 체계 구축
 - 중점국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협상역량강화,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적 TBT 대응 연대·협력, 기업지원 서비스 통합 및 산업계 인력양성을 통한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대·협력 강화 추진

- 8.12 ▷ 한국은행, 터키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금융협력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체결 하였으며, 계약금액은 2.3조 원/175억 리라(20억 달러 상당)이며 계약기간은 3년

(3) 산업·고용 및 기타

- 1.14 ▷ 정부, 「2021년 한국판 뉴딜 실행계획」 발표
- 재정의 본격적인 투자를 통한 체감성과 창출
 - 법·제도 개선을 통한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 완비
 -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본격 개시, 뉴딜 정책금융 지원 등을 통해 민간 뉴딜 투자 및 성과공유 가속화
 - 투자 지원, 민간 아이디어 공모, 뉴딜 성과 홍보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및 민간 확산 추진
- 3.4 ▷ 정부,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 발표
- 추경을 통한 일자리를 포함, 올해 78만여 개의 여성일자리 창출로 고용위기 즉각 대응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연장, 이·전직 고용서비스지원 등 고용유지 지원 강화
 - 여학생 이공계 진입 확대를 위한 진로·취업 강화와 직업훈련을 통한 디지털 역량 제고
 - 돌봄·가사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 및 여성 플랫폼 종사자 근로 실태조사 추진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제도)에 절대평가 요소 도입 등 통해 성별업종분리 해소
- 4.1 ▷ 정부, 「산업 디지털전환 확산 전략(디지털 BIG-PUSH)」 발표
- ①준비 ②도입 ③정착 ④확산 ⑤고도화 5단계로 구성된 「산업DX단계 모델」 마련
 - 2025년까지 10개 업종(자동차, 조선 등) 평균은 도입, 선도 30%는 확산 단계로의 진입 추진
 - 10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30대 한걸음 프로젝트 등 업종별 맞춤형 전략 시리즈 발표 및 수준별 프로젝트 추진
 - 기업DX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및 산업데이터 플랫폼 확대 (2020년 5개 → 2021년 14개 → 2025년 50개)
 - 협업지원센터 확대, 산업분야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공간지원 추진
- 5.14 ▷ 정부, 「K-반도체 전략」 발표
-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화를 위한 'K-반도체 벨트' 조성
 -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반도체 설비투자 자금 신설 등 투자 지원의 확대
 - 반도체 단지의 10년치 용수물량 확보 및 전력 최대 50% 공동분담 등 인프라 지원
 - 반도체 산업인력 3.6만 명 육성 및 실무형 학과신설 등을 통한 인력 양성·관리 강화

- 차세대 전력 반도체, AI반도체, 첨단센서 등의 개발에 1.5조 원 이상 투입 추진
 -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논의
- 7.15** ▷ 정부,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 ‘안전망강화’를 ‘휴먼 뉴딜’로 대폭 확대·개편하여 사람투자 강화, 불평등·격차해소 추진
 - 2025년까지의 누적 총사업비 규모를 220조 원으로 대폭 확대
 - 디지털 융·복합 및 뉴딜 1.0의 성과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디지털 신산업 육성
 - 2030 NDC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 정비 및 산업계 탄소감축 체제 구축
 -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집중,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부담 경감 및 고용확대 지원강화
- * 소프트웨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 8.5** ▷ 정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 고시
- 고용노동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440원) 고시
 -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월 1,914,440원
 -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 9.30** ▷ 정부,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 발표
- 고령자 노동시작 지속참여를 위한 ①주된 일자리 계속고용 ②노동이동 재취업지원 ③ 체계적 창업지원 추진 및 ④고령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능력개발 지원 ⑤인프라 구축을 병행
 -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및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 대응 연구회) 논의 추진
 - 노동이동과 재취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 신설
 - 중장년 퇴직인력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 지원
 - 디지털 전환 적응 지원 등 고령자 직무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 추진
- 12.20** ▷ 정부,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 건물의 에너지성능을 측정·기록한 데이터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건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축건물의 제로에너지화, 기존건물의 그린리모델링을 확산
 - 교통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감축 효과가 큰 사업용차량(버스·택시·화물차) 50만대의 전기·수소차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 수요관리를 병행
 - 정주지의 탄소흡수량을 산정하고 UN에 제출할 계획(2024년까지)

- 국토·도시 구역 별로 배출·흡수량을 시각화한 탄소배출 공간지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중심의 탄소 데이터 기반을 마련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I. 경제 동향		
1. 실물경제		
가. 세계경제	조사국	박광용
나. 국내경제	조사국	박상우, 이은송, 송상윤, 이재진, 신동수, 주 욱, 민은지
	지역협력실	이재민
2. 금융·외환시장		
가. 국제금융시장	국제국	권나은
나. 국내금융시장	금융시장국	오경현
	국제국	이재영, 신준식
II. 업무 현황		
1. 중기전략	기획협력국	김부경, 최종윤
2. 통화신용정책		
가. 물가안정목표	조사국	김찬우
	통화정책국	박종익
나. 기준금리	통화정책국	박종익
다. 여수신	통화정책국	이은국
라. 공개시장운영	금융결제국	정나리, 정상운, 정영숙, 한정희
마. 통화정책 커뮤니케이션	금융시장국	박선욱
	통화정책국	박종익
	금융통화위원회실	안희훈
	커뮤니케이션국	한상우, 이채현
3. 금융안정		
가. 거시건전성 분석·평가	금융안정국	정천수
나. 외환시장 안정조치	국제국	권나은
다. 중층적 금융안전망 확충	국제협력국	김민영
라. 금융불안 요인 발생 시 비상대응 체제 가동	금융시장국	오경현
4. 발권		
가. 화폐 발행	발권국	이태검, 이가영, 윤희진
나. 화폐 유통	발권국	이가영, 윤희진
다. 대외 협력	발권국	이가영
5. 지급결제		
가. 한은금융망 운영	금융결제국	김덕형
나. 감시 및 리스크 관리	금융결제국	김덕형
다. 지급결제제도 개선	금융결제국	김덕형
라. 지급결제 관련 국제협력	금융결제국	김덕형
6. 외환 및 국제협력		
가. 외국환	국제국	권나은, 이재영, 신준식, 조지은
나. 외화자산 운용	외자운용원	최정은
다. 국제협력	국제협력국	김민영

연차보고서 세부 부문	집필자	
7. 조사통계		
가. 조사연구	조사국 경제연구원 지역협력실	이규환 이경태 박종필
나. 통계	경제통계국	이지선, 이에림
8. 국고 및 증권		
가. 국고	국고증권실	천재정
나. 증권	국고증권실	이지선
다. 자금관리	국고증권실	이지선
9. 대외 커뮤니케이션		
가. 국민과의 소통 확대	커뮤니케이션국 기획협력국	한상우, 이채현, 설범영, 류현정 김광룡
나. 대국민 경제교육 활동 강화	경제교육실	서하나
III. 경영 상황		
1. 조직 운영		
가. 조직 체계	기획협력국	유 리
나. 조직 운영방식	기획협력국	유 리, 민다한
다. 조직문화 개선 및 경영인사 혁신 추진	기획협력국	김부경, 최중윤
라. 교육훈련	인재개발원	김현희
마. 인력 운영	인사경영국	노정우
바. 부패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	인사경영국	하지원
사. 디지털 혁신을 통한 업무 전문성 및 효율성 강화	디지털혁신실	노재광
아. IT시스템 개선·확충	전산정보국	김상명
자. 통합별관 건축 추진	별관건축본부	유철중
2. 재무 현황	기획협력국	차전영
부록		
1. 한국은행 개요		
(1) 연혁 및 설립목적	통화정책국	김효손
(2) 조직		
가.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실	안희훈
나. 집행간부 및 감사	비서실	이유석
다. 부서조직 및 소관업무	기획협력국	유 리
라. 한국은행 조직도	기획협력국	유 리
2. 금융통화위원회의 주요 의결 및 논의사항	금융통화위원회실	안희훈
3. 경제일지	조사국	이은송
4. 부문별 담당 부서 및 집필자	커뮤니케이션국	이채현
보고서 작성총괄	커뮤니케이션국	박종현, 한상우, 이채현